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삭제 및 표현의 자유 원칙 신설 등〉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3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삭제	3
2. 정보통신망 대상 표현의 자유 원칙 신설	27
3. 불법정보 신고 시 기술적으로 자동화된 조치에 대한 인적 재검토 절차 마련	3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섭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6. 26.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4까지, 제44조의16·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Ⅲ. 검토의견

1.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삭제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이하 “차별·혐오 표현 정보”)를 불법정보 유형에서 제외하고(안 제44조의 7제1항제2호의2 삭제),
-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가중적 손해배상, 사실확인 활동 지원, 투명성센터, 과징금 등에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항 삭제, 제44조의10·제44조의11 삭제, 제44조의16·제44조의17,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 삭제 등).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2. (생략)	① ----- ----- ----- ----- -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	1. 2.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u>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u> <u>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u> 3. ~ 9. (생략) <u>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u> <u>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u>	3.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 ⑥ (생략)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u> <u>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u> <u>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u> <u>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u> <u>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u> <u>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u> <u>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u>	

현행	개정안
<u>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u> <u>· 횡수, 전파의 정도</u> 4.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u> 5. <u>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u> 6. <u>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u> 7. <u>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u> 8.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u> 9. <u>가해자의 재산상태</u> 10. <u>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u>	

현행	개정안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	

현행	개정안
<u>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u>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u> <u>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u> <u>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u> <u>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현행	개정안
<u>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u> <u>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u>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u>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2(<u>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u> 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u>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u> 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4조의12(<u>불법정보</u> 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 ----- ----- <u>불법정보</u> -----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u> 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u> 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u>불법정보</u> ----- ----- <u>불법정보</u> <u>인</u> ----- ----- -----. -----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③ -----

현행	개정안
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u>불법정보</u> 또는 <u>허위조작정보</u>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3.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u>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생략)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	----- -----<u>불법정보</u>의 -----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불법정보</u>의----- ----- ----- 4.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고된 <u>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u>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생략) 4.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u>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6. (생략) ②·③ (생략) <u>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u>	----- ----- -----. 1. (현행과 같음) 2. -----<u>불법정보의</u>----- ----- ----- ----- 3. (현행과 같음) 4. <u>불법정보에</u>----- ----- ----- ----- -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u> <u>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u>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u> <u>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삭 제>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	<삭 제>

현행	개정안
<u>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u> <u>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u> <u>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은 정보통신망에서 허위 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 개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주요 개정 사항>

정보통신망법	내 용
제2조제1항제3호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규정
제44조의6	이용자의 제공청구 정보에 분쟁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추가
제44조의7제1항제2호	불법정보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 삭제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불법정보에 차별·혐오 표현 정보 추가
제44조의7제2항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제44조의10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제44조의11	가중적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자율적인 운영정책
제44조의13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제44조의1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처리 내역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여부 확인 및 조사 등 감독 권한 신설
제44조의16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제44조의1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의 설치 및 그 업무
제44조의18~44조의23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 확대
제44조의24~제44조의26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도

- 구체적인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가중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2025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서 총 2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¹⁾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

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 유통을 억제하고, 피해 발생 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확산으로 정보의 생산·유통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이 국민 개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이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졌음.

- 나아가,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명예·이익·신용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공공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는 우려 또한 존재함.

○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다양한 비판과 우려도 제기되었음.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적일 경우 헌법상 보장

1) 대안에 반영된 각 법률안 및 청원의 목록은 참고자료 참조

된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이른바 권력자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전략적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에,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고려한 여러 수정·보완사항이 반영되었음.

- 예를 들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가중 손해배상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수정사항이 반영되었음.

○ 따라서, 현행법은 이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표현의 자유 보호와 피해자 구제라는 상충하는 가치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판단으로 도출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의견 및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취지로 보임.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차별·혐오 표현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와 근거를 삭제하고, ②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제도 근거를 삭제하며, ③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투명성센터 운영 근거를 삭제하며, ④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한편, 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제도 운영과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신고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 공표 의무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허위조작정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이 삭제하고자 하는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6일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것인바,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이를 다시 삭제하는 개정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혐오·차별 표현 및 허위조작정보 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인종,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로 ① 고의성, ② 의도성 또는 목적성, ③ 침해성을 규정하여 불명확성을 개선하였으므로 혐오·차별 표현 및 허위조작정보 정의 삭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인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 판결 절차와 역 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 보도는 가중 배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가중적 손해배상제도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은 플랫폼 사업자가 이미 약관이나 커뮤니티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던 자율정책의 내

용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의 자율운영 정책 대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취약한 국내 사실확인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투명성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투명성센터 설치 조항 삭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이미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 등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삭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정보통신망 대상 표현의 자유 원칙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용자 및 게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게재·유통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이러한 권리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않도록 하며,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재·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유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3조의2(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 ① 이용자 및 게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게재·유통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u> <u>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목적</u>

현행	개정안
	<u>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u> ③ <u>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재·유통되려는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게재 또는 유통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

나. 검토의견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권리침해정보 유통, 허위사실의 유포 등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유통에 관한 규제가 일부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규제가 국가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유통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 게재·유통되는 정보의 유통 여부가 국가의 사전적인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법률유보의 원칙 및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이미 헌법을 근거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원칙이 정보통신망에서도 적용됨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2)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 이미 「헌법」 제21조제1항·4항, 제37조제2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검열 금지, 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최소화 등을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불법정보 신고 시 기술적으로 자동화된 조치에 대한 인적 재검토 절차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자나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제44조의12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2(<u>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u>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u>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u> 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4조의12(<u>불법정보의</u>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 ----- ----- <u>불법정보를</u>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u> 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	② ----- ----- <u>불법정보로</u> ----- -----

현행	개정안
적 위치, 해당 정보가 <u>불법정보</u> 또는 <u>허위조작정보인</u>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8. (생략)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u>-불법정보인</u>----- ----- ----- ----- -----. ----- ----- -----. ③ ----- ----- ----- ----- ----- ----- -----. <u>이 경우 해당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u> 1. ~ 8. (현행과 같음) ④ -----

현행	개정안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생략)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u>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u>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 ----- ----- 이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담당자로서 하여금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불법정보의</u> ----- ----- -----. ⑦·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4조의12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³⁾,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⁴⁾.
-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가 사람의 직접적인 판단·의사결정에 기반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자동화되어 이루어질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동화된 조치에 대하여 신고자·게재자가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르면, 신고자·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기술적으로 자동화된 조치에 대한 인적 재검토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와 별개로 안 제44조의12제3항과 인적 재검토 요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44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보장되어 있으며, 안 제44조의12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 시 인적 재검토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므로 안 제44조의12제3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 절차와 실질적으로 중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44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재검토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4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른 조치’가 사람의 개입 없이 조치의 결정과 집행 등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는지, 정보의 탐지·분류 과정에만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자동화하고 최종적인 조치 여부는 사람이 판단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에 따라 재검토 대상 또한 달

라질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음⁵⁾.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 현행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조치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자와 게재자는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다층 구조의 이의제기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28

[참고자료] 현행법으로 통합·조정된 법률안·청원 목록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352호)	김장겸의원	2024. 6.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372호)	조승환의원	2024. 7.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403호)	신동욱의원	2024. 7.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475호)	조인철의원	2024. 8.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842호)	이정현의원	2024. 8.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370호)	김미애의원	2024. 8.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389호)	최기상의원	2024. 8.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560호)	전현희의원	2024. 10.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819호)	조국의원	2024. 10.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271호)	김문수의원	2025. 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838호)	김예지의원	2025. 3. 12.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282호)	고동진의원	2025. 3.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332호)	양부남의원	2025. 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704호)	이종배의원	2025. 4.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630호)	조인철의원	2025. 5.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004호)	전용기의원	2025. 8.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378호)	한정애의원	2025. 8.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388호)	김우영의원	2025. 8.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605호)	정일영의원	2025. 9.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814호)	박주민의원	2025. 9.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818호)	조인철의원	2025. 9.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936호)	한민수의원	2025. 9.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684호)	최민희의원	2025. 10. 23.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698호)	윤준병의원	2025. 10.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169호)	이주희의원	2025. 11.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522호)	이해민의원	2025. 11.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576호)	이용우의원	2025. 11. 26.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제2200029호)	유미숙 외 51,408인	2024. 8. 19.